

# “시교과서 시범 운영 등으로 속도 조절 필요”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고의숙 의원 “교수 학습에 영향… 신중 검토해야” 학교 사용 예산 대비 본청 업무추진비 증가 지적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전면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단계적 도입 또는 시범운영 등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연이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학년도 제주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의 전면 실시와 관련, 시행 유보 또는 시범 운영을 통해 문

제점을 보완한 뒤 단계적 도입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긴축 재정 속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의 필요성과 준비 상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내년 본 예산에만 344억원이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한 예산”이라며 “상당히 어려운 예산 속에서 내년에만 지금 35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AI 디지털 교과서 예산으로 들어간다면, 문제는 향후 구둑로만 향후 5년간 또 상당한 예산이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이어 “디지털 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현재 시안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달 말에 시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를 보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유 부교육감은 “AI 디지털 교과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도입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적정성을 검토하며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AI 교육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학교 현장에 쓰일 예산 대비 본청의 업무추진비는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은 “최근 5년 간 업무 추진 현황을 보면, 2021년 9억9900만원이었던 것이 2022년 10억원, 2023년 14억원, 올해 12억원으로 줄었다가 2025년도엔 14억원으로 증가했다”며 “교육청 예산은 줄어지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특히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1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것은 사업을 많이 늘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예산을 학교에 보내줬으면 학교 현장의 교육이 더욱 활발해지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당초 이날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계획했지만, 다음 날(21일)오후 2시 제4차 회의를 열어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내년 시행 고교학점제 과목·진로설계 지원 도교육청, 중3 대상 ‘징검다리 워크북’ 개발·보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부터 도내 45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중학생을 위한 징검다리 고교학점제 워크북’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5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따라 중학생들의 고교학점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워크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워크북 제작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고교학점제, 중학교 진로·진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개발위원으로 위촉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교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총 7650부가 제작됐으며,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하여 교사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고교학점제를 쉽게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 탐색 및 과목 선택 경험 제공을 통해 고등학교 생활을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며 “중학교 기말고사 이후 학년말 자기개발 시기에 워크북을 활용하도록 하여, 학생 개인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제주4·3 희생자·유족 981명 추가 결정 희생자 64명·유족 917명… 생존 후유장애인 1명 포함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981명(희생자 64, 유족 917)이 4·3희생자와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된 희생자는 사망자 30명, 행방불명자 14명, 후유장애 1명, 수형인 19명 등이다. 이번 결정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23.1.1~6.30)에 접수된 1만9559명(희생자 734, 유족 1만8825)에 대한 신고 건 가운데 두 번째 심의·결정된 내용이다. 이로써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13만5094명(희생자 1만4,935명, 유족 12만159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가족 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혼인신고, 입양신고 및 실종신고 청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정이 이뤄졌다. 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연내 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14명 희생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된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4·3유족증 신청 및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이 함께 발송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가을비 머금은 코스모스 20일 제주시 이호동 공한지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 행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주 지방세 고액체납 185명 명단 공개 최고액 3억9400만원… 1억원 이상 체납자도 15명 도,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 강화·출국금지 등 조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85명의 명단을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법인 62

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23명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고, 1억원 초과 체납자도 15명에 이른다. 공개자 중 최고액 지방세 체납자는 지난 2021년 폐업한 L호텔 대표자로 취득세 등 13건·3억9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어 지방소득세 등 11건·2억1600만원을 체납한 K씨가 뒤를 이었다. 1억원 이상 개인 체납자 8명 중 5명이 해당 법

인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징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법인 체납자 중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2억8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김모씨(경기도 시흥시)의 부동산 업법인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세·부과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 중 최고액은 개발부담금 1억1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강모씨(경남 통영시)로 나타났고, 법인은 역시 개발부담금 5800만원을 체납한 J건설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고액체납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고,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공개하고 있으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제주자치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출국금지와 관여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가족 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혼인신고, 입양신고 및 실종신고 청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정이 이뤄졌다. 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연내 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14명 희생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된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4·3유족증 신청 및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이 함께 발송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